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유 석 준 편저

한국의 사회발전 -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유 석 준 편저

진통사현

"한국의 발전은 다른 제3세계와 비교하여 매우 특수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특수성이 나타난 이유를 규명하려면 보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역사적 접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 가운데 이 책은 특히 전쟁의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주목의 결과 전쟁이 지역주의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을 통해 대개된 지역주의의 형성이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전파된 계급의식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책은 정확히 이 주장에서 명추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확인된 여러 차원의 사실을 망라해 모아 놓은 책이다.

10,000원



9 788988 164167

ISBN 89-88164-16-4

사회과학4
한국의 사회발전
-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1판인쇄 · 2002년 3월 7일
1판 1쇄 · 2002년 3월 15일

편집자 · 유석춘
펴낸이 · 함재봉
펴낸곳 · 도서출판 전통과현대
등록 1999. 1. 17 제98-41호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36 보광빌딩 503호
영업부 02-3672-2479
편집부 02-3672-2321
팩 스 02-3672-4631
www.jontong.co.kr
jontong@jontong.co.kr
© 유석춘, 2002
ISBN 89-88164-16-4 (93330)

값 10,000원

차례

8 머리말

제1부 발전이론과 한국의 발전

- 22 1장 제3세계 발전이론과 한국 | 유석춘
50 2장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 한국을 중심으로 | 유석춘
66 3장 한국의 개혁정치와 사회발전 | 유석춘

제2부 한국전쟁과 지역주의

- 104 4장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 유석춘 · 이우영 · 장덕진
134 5장 지역감정의 사회심리학 | 유석춘 · 김진혁
147 6장 유동표에 대한 판별분석 : 87년 대통령선거 | 유석춘 · 서원석

제3부 지역주의와 변혁운동

- 184 7장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 유석춘 · 박병영
214 8장 대학생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선택 : 1987년 대통령 선거 | 유석춘
236 9장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 가지 기반 : 계급의식과 지역차별의식 | 유석춘 · 심재범

- 274 참고문헌

제 2 장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한국을 중심으로 *

유석춘

1. 머리말

한국사회가 21세기를 위해 준비한 것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관심에 따라 그리고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문제의 하나로 '식민지 경험에 대한 평가'를 꼽는다면 누구도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청산론'과 '타협론' 혹은 '수탈론' (신용하, 1997)과 '근대화론' (안병직, 1997)으로 대표되는 엇갈린 평가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도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계속할 수는 없다. 19세기를 규정하였던 '열강의 식민지 경영'은 물론이고, 20세기를 규정하였던 '동서의 이데올로기 대립' 또한 이제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나아가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좁아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오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21세기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소외시킬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 이 글은 『전통과현대』 99년 겨울호(통권 10호: 44-59)에 발표되었다.

오늘의 한반도는 과거 두 세기를 규정하였던 역사의 힘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매우 특수한 공간이다. 남과 북의 분단과 대립이 냉전의 관성을 확인해 주는 '차가운' 현실이라면, 일본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식민지의 유산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 꿈틀대고 있음을 자각시켜 주는 '뜨거운' 현실이다. 과연 우리는 다가오는 새 세기에 일본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식민지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식민지 시대에 관한 연구의 질과 양이 향상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역사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시각의 사회과학자들이 식민지 연구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서 식민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식민지를 전후한 시기와의 관련성을 거시적으로 이론화시키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의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식민지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넓히는 일이다. 즉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문제를 통시적으로 추적함은 물론 공시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는 식민지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혹은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의 지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없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국수주의라고 불리는 편협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9세기 아니 20세기초까지 식민지배는 전지구적인 현상이었다. 마치 요즈음의 경제가 전지구화 되고 있듯이 당시의 식민지 경영은 전지구화 되어 있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은 거의 모두가 유럽의 식민지였다. 따라서 오늘의 기준에서 본다면 식민지배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특수한 사례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한 입장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 경험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식민지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식민지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당위를 받아들일 수는 더욱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 경험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식민지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고, 또 다른 식민지는 20세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 어떤 식민지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또 다른 식민지는 전혀 모르는 생소한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의 400년 식민지 경험과 우리 나라의 35년 식민지 경험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수 천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서로 매우 잘 아는 이웃 나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사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전혀 교류가 없던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한 사실을 동일한 맥락에서 평가할 수는 더욱 없다. 나아가서 산업화의 선발국인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지배한 경우와, 산업화의 후발국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경우를 같은 시각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이처럼 다양한 식민지 경험은 물론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시작된 탈식민지의 전개와 또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사회가 남겨 놓은 유산은 탈식민지 시대가 출발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식민지 이전의 전통문화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두 가지 세력의 문화적 변용이 진행되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토착문화의 끊임없는 저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 되었건 탈식민지는 바로 이러한 식민지 시대의 상황이 남겨 놓은 유산으로부터 조건지어져 출발하였다. 따라서 탈식민지 시대를 특징짓는 민족주의의 전개 또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아 왔던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빗더미에

올라앉아 경제의 발전은 물론 정치의 발전까지 후퇴하면서 몰락하였다. 반면에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아시아적 가치'의 보편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정치의 민주화는 물론이고 아직까지 경제의 산업화조차 이룩하지 못하고 있어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들먹이기조차 어색한 상황이다.

탈식민지 시대에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성은 과연 식민지 경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일인가. 지금까지 식민지를 연구해 온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우 이 문제를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최근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이 문제를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식민지 수탈론'이 식민지의 문제를 당시로 한정하거나 혹은 조선 후기와의 단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정태현, 1997),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의 문제를 탈식민지의 전개와 연관짓고 있기 때문이다(屈和生, 1995).

이 글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는 동의로부터 출발한다. 즉 이 글은 식민지배의 경험을 과거의 응당이에 파묻어 놓고 단절된 역사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부정적 혹은 긍정적)을 한 실존하는 역사의 누적된 힘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에 존재해 온 식민지와 탈식민지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다른 식민지 국가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는 입체적인 작업이다(전상인, 1999; 국민호, 1999; 김태리, 1999; 최병욱, 1999; 신윤환, 1999; 서용석, 1999). 이 글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동남

아 5개국의 경험과 비교의 시각에서 종합하여 식민지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 절에서는 동남아 5개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식민지배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다음, 탈식민지 시대가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을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즉 식민지 시대의 경험과 탈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전개를 어떻게 연결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논의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2. 식민지배의 다양성

식민지배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하기 위해 선택된 국가들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각론이 이번 특집과 관련하여 준비된 국가들로 제한하였다는 사실만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의 기준을 선택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역시 매우 복합적인 문제여서 여기에서는 다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제한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비교 기준이 채택되었다. 첫째는, 식민지배의 기간이다. 지배의 기간이 몇십 년 수준으로 짧은 경우와 몇 백 년 수준으로 긴 경우 식민지의 경험은 엄청난 차별성을 제공한다. 기간이 긴 경우 식민지배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존재하는 국민 국가의 건설 과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필

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400년 가까운 지배가 없었다면 현재 존재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분열된 촌락 중심의 사회였다. 또한 이 두 경우보다는 식민지배의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역시 술탄이 지배하는 소왕국으로 분열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영국의 지배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말레이시아는 탄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식민지배의 기간이 말레이시아만큼 긴 베트남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그 지역에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통일된 유교 왕조가 각각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식민모국 일본에 거꾸로 문화를 전파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식민지배는 오히려 민족적 자존심을 깎아지른 채 좌절의 경험이 될 뿐이었다. 특히 그것이 이웃한 나라로부터 더 나은 경우에 좌절의 경험은 더욱 쓰라린 것이었다.

둘째는, 식민모국과 식민지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나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Myers & Peattie, 1984). 문화가 비슷하고 문화를 공유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하여 전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식민지에 대한 개입 그리고 식민모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국가가 동남아시아에 건설한 식민지에서는 식민모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장될 수만 있다면 정치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의 통제와 동화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식민모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값싸고 질 좋은 원자재(예를 들면 고무나 주석 등)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역을 통해 부를 획득할 수만 있다면 현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상관하지 않았다. 유럽인은 동남아인을 유럽인과 같이 만들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¹¹⁾

이에 반해 일본이 지배한 한국과 대만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동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내선일제'라는 정치적 구호와 함께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에서 직접 건너온 식민지 관리들이 사회의 모든 구석을 직접 통제하고 장악하여, 식민지배를 위한 토지조사는 물론 철도나 도로의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그리고 반상회와 같은 말단 행정단위의 조직을 통해 식민지 백성을 황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시켰다. 일본은 한국을 동화시켜 영원한 식민지 즉 일본의 일부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식민모국의 산업화 수준이다(Kolhi, 1994). 식민모국이 산업화의 선발국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식민지배의 강도와 방향은 판이하게 나타난다. 산업화의 선발국이었던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영국과 프랑스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하였기 때문에 세계의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특정한 식민지 하나 하나의 존재, 나아가서 그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의 확보와 무역의 기회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 가운데 산업화의 가장 후발 국가였기 때문에 식

1) 필리핀의 기독교화가 반증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집에 포함된 서용석 교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듯이 스페인의 기독교화는 선교의 전략을 현지의 상황과 적절히 조화시킨 결과이지 식민정책이 달라서 나타난 일은 아니었다. 우선 필리핀에는 유교나 불교 혹은 이슬람과 같은 체계적인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민간을 중심으로 한 무속신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따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또한 스페인이 필리핀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도 현지의 토착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슬람이 자리잡고 있던 민다나오에는 기독교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의 확보와 상품을 팔기 위한 시장의 존재가 해외로의 팽창에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더욱더 철저히 지배하였다.

넷째는, 식민지배의 과정에 제3의 민족이 개입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김영애 외, 1995). 제3의 민족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식민지배가 초래하는 민족갈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대신 식민지 내부의 인종문제로 갈등이 전가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 식민지에서는 민족내부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기준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유럽의 열강은 모두 현지의 중국인을 식민지 경영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부드러운 지배를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 온 일본은 이러한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한국인 내부에서 협조자를 구해야만 했다. 그 결과 식민지배의 과정을 겪으며 한국은 민족내부의 갈등을 심각하게 겪게 되었는데 반하여, 동남아의 유럽인들은 식민지배의 완충역할을 하는 현지 제3의 민족집단으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대만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본토에서 건너 온 중국인들이 떠맡았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의 식민지 경험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이 표를 통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험이 식민지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배를 받은 기간은 가장 짧지만, 역사문화적인 근접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식민모국은 제국주의 세력 가운데 산업화의 가장 후발국이었으며, 식민지배의 갈등을 완충해 줄 다른 제3의 민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은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식민모국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표 2-1. 식민지배의 다양성

	식민지배의 기간	역사문화적 상호이해	식민도국의 산업화 상황	식민지배 개입 제3의 민족
일본의 한국지배	1910-1945 (35)	매우 높음	후발국	없음
일본의 대만지배	1896-1945 (49)	비교적 높음	후발국	본토 중국인
프랑스의 베트남지배	1857-1956 (99)	비교적 낮음	선발국	현지 중국인
영국의 말레이시아지배	1824-1957 (134)	매우 낮음	선발국	현지 중국인
화란의 인도네시아지배	1602-1945 (343)	매우 낮음	선발국	현지 중국인
스페인(미국)의 필리핀 지배	1565-1945 (380)	매우 낮음	선발국	거의 없음

3. 탈식민지의 전개

식민지배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로부터 출발한 탈식민지의 전개 또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선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 식민지의 정치적 독립은 탈식민지를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다. 2차 대전의 승전국 식민지였으나 혹은 패전국 식민지였으나에 따라 탈식민지는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고, 동남아시아 4개국은 승전국의 식민지였다. 여기에 더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은 동남아의 식민지 국가들이 모두 2차 대전의 막바지에는 잠시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은 식민지 이후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민족주의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모든 식민

지에서 민족주의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저항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도는 앞서 살펴 본 식민지 상황의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여 준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각 국가별로 모두 다르지만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를 대조해 보는 일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은 패전국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가혹한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식민통치 전기간에 걸쳐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문화적으로 단일한 단위로 묶였다. 일본은 꿈에라도 한반도가 독립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에 엄청난 물량의 산업시설을 투자하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의 기준에서 한반도에 들어선 홍남의 질소비료공장, 수풍의 수력발전소, 진남포의 공업단지 등은 모두 첨단 중화학 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이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이 식민지의 농업 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투자한 관개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 역시 다른 식민지의 경우에는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적극적인 식민지 경영의 모습이었다(Cumings, 1984).

그런데 일본은 패전하였고 한국은 갑자기 독립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탈식민지 한국의 독특한 출발 조건을 제공하였다. 하나는 식민지 한국에서는 다른 유럽의 동남아 식민지와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산업부문에 유입되어 노동자로서 혹은 기업가로서 이른바 근대적 규율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식민지 사회를 통해서 근대성의 확립이 진척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통합하여 지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컸

던 만큼 탈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족주의가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일본은 경제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동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패전은 그러한 노력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로 하여금 식민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²⁾ 이 조건은 일본의 식민통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억압적이었다는 이른바 '식민지 수탈론'의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식민지에 대한 '수탈'과 '근대화'가 동시에 그리고 가장 강도 높게 진행된 특수한 사례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김동노, 1998).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독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열강의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파리회담의 결과로 필리핀은 다시 미국의 식민지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켰을지는 몰라도 정치적 자율성과 토착적 문화는 오히려 보호하였거나 혹은 최소한 방치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확보와 무역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경제적 관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지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타협하며 앞으로 적당한 때에 필리핀을 독립시키겠다는 온건한 방식의 식민통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2차대전의 승전과 함께 필리핀을 독립시켰다. 따라서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2) 물론 독립 후 곧이어 진행된 분단과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식민통치에 협조한 집단에 대한 민족주의적 배척은 사실상 상당히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주의는 이 과정에서 강화될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적극적 방식의 산업화를 필리핀에서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식민지 기간에 필리핀에는 변변한 2차 산업이 전혀 들어서지 않았다. 미국은 필리핀을 동화시켜 영원히 합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h, 1991).

필리핀과 같은 상황의 전개는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동남아 전체는 비록 나라가 다르기는 해도 모두 유럽의 식민지였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통합하고 동화하여 유럽과 같은 사회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동남아를 1차상품의 공급지 그리고 불평등한 교환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한국에서와 같은 본격적인 산업화의 진전은 동남아시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민통치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그리고 자원의 수탈을 위한 1차산업에 집중되었을 뿐이었고 농촌사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계기는 오히려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한 2차 대전의 마지막 3년 동안에 발생하였다. 일본은 동남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면서 스스로를 유럽의 식민지배를 청산하는 해방군으로 선전하여 식민지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손을 잡으려 하였다. 특히 일본은 유럽 식민지배의 협조자 역할을 해오며 경제적 상층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현지의 중국인을 목표물로 삼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겼다(김영애 외, 1995).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현지의 지도자들 일부가 동조하면서 동남아의 민족주의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독립 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현지의 중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식민지를 회복한

승전국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는 각각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독립시켰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은 극단적인 민족적 반일 감정을 이들은 자신의 식민모국에 대해 전혀 품지 않게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탈식민지 시대의 출발은 식민지의 경험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모국에 대한 탈식민지 국가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의 산업화 수준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식민지 근대화의 경험 또한 식민지배의 구체적인 상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은 2차 대전 이후에 성립한 냉전구조의 최전선에서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했다. 그리고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우'를 선택한 국가는 '좌'와의 대결을 위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상당한 수준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³⁾

4. 식민지와 탈식민지의 관계

식민지배의 다양성은 탈식민지 시대 민족주의의 전개에 다양성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사례와 교차시킨 한국의 경험은 그것이 너무나 특수한 사례였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있다. 모든 식민지배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식민지보다 한국이 철저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식민모국에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확신할 수 있다. 바

3) 이 과정 또한 매우 복잡한 과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탈식민지 시대의 전개 특히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에 관해서는 유석춘·최복천(1999)을 참고할 것.

로 이런 맥락에서 수탈과 근대화는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리상의 발견을 통한 식민지 건설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특징이었다.

비슷한 경우를 굳이 찾으려 한다면 폴란드에 대한 독일과 러시아의 침략 혹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개입 등과 같이 오래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간의 갈등과 침략 그리고 점령은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식민지가 아니라 국민국가의 건설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같은 식민지배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만큼 한일관계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일제시대를 평가하는 작업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식민지 유산은 분단의 경험과 더불어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신하여 온 우리의 역사를 조건 지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단의 기원은 일제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노출된 '좌'와 '우'라는 민족내부의 이념적 갈등과도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한 평가는 곧 한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의 핵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현실에 뿌리를 둔 '타협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상에 기초한 '청산론'이다. 타협론은 일제가 물러간 후 다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활용범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지는 입장이다. 그래서 비록 친일을 하였더라도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 반성을 전제로 건국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반하여 청산론은 친일한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민특위'와 같은 기구를 통해 친일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고 또한 이를 철저히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 건설에 필요한 '노우하우'는 부차적인 자질일 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족적 자존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하고 학계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근대화론'은 식민지배 기간에 발생하였던 산업화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어 경위야 어찌되었던 식민지배를 거치며 한반도는 산업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자본대로 그리고 노동은 노동대로 근대성의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수탈론'은 그러한 자본주의의 진전이 결국은 수탈을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의 산업화는 일본이 한국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였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어 선뜻 어느 한 쪽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현실과 이상' 혹은 '결과와 목적'은 항상 괴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인다. 어느 한 쪽의 완승은 항상 그에 따른 반작용을 낳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최근 우리 현대사는 다행히 역사의 시계추가 균형을 찾아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의 시대에는 타협론이 지배했다. 친일한 경력이 있더라도 반공과 산업화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를 캐지 않고 중용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탄생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산업화를 이상과제로 인식했던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제2 건국'을 통해 늦게나마 항일을 기리고 친일을 단죄하는 청산론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거꾸로 나타나며 역시 균형을 찾고 있다.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의 시대에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맹아를 조선에서 찾는 작업이 각광을 받았다. 당시의 학문적 분위기에서는 식민지가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생각은 전혀 발을 붙일 수 없었다. 식민지배는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의 단절일 뿐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역사적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면서부터는 식민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앞과 뒤의 시기와 연관지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존재하였다는 자본주의의 맹아와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를 역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배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단절된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식민지배라는 질곡은 해방이 된지 이미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탈식민지 시대의 한국'이 과거의 굴레를 벗고 주변의 국가 특히 일본과 함께 21세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과거라는 기억의 웅덩이에 묻어 둔 식민지 문제를 햇볕 속으로 끄집어내어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1세기의 동아시아가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탈론' 뿐만 아니라 '근대화론'도 필요하고, 또한 '타협론' 뿐만 아니라 '청산론'도 필요하다. 다른 식민지의 경험과 교차시켜 드러난 식민지 한국의 특수성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